월/요/광/장

김규열

잡종강세(雜種強勢)

지나가며 웃자고 하는 이야기. 한국어를 공부하는 어느 외국인이 묻는다. 왜 한국인은 모든 것을 먹어버리냐고. 의아한 표정을 짓자, 한국사람은 "나이를 먹다, 마음을 먹다, 더위를 먹다, 욕을 먹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외국인이 다시 묻는다. 한국인은 개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욕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왜 앞에 '개'를 붙이는지 궁금하단다. 그 친구 대답할 틈도 없이 또 묻는다.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한국어로 옮기면 '잡종차'가 되는데 '잡종'도 욕할 때 쓰는 말이 맞느냐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봤다. 우리말에 '雜'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것 중에 좋은 어감으로 쓰이는 말이 있는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잡상인, 잡동사니, 잡념 정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방에게 '잡×, 잡×'을 입에 담으려면 일전은 각오해야 한다. 사전적으로, '유전형질이 서로 다른 부모의 교배에 의해 생긴 자손' 이라는 의미를 갖는 '잡종'이라는 말 역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차별어이자 모욕적인 말이다.

그러나, 생물학에서 잡종이라는 말의 위상은 사뭇 다르다. 생물학에 '잡종강세'(雜種强勢)라는 말이 있다. 새로 태어난 잡종은 순수종인 부모보다 적응력이나, 생식력, 크기에 있어서 반드시 뛰어나다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즐기는 바나나, 땅콩, 옥수수, 장미, 커피 등이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잡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끌린다. 반대로 꼼꼼하고 조용한 사람은 호탕하고 털털한 사람에게 끌린다.

우리는 왜 자신에게는 없는 면을 갖춘 색다른 상대에게 끌리는 것일까. 여기에는 비슷한 유전자끼리의 결합은 열등한 후손을 낳는다는 생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 생물학에서만큼은 잡종강세는 진리인 셈이다.

세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혼돈의 연속이다. 세계 도처에서 인종간, 국가간, 종교간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만 보더라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립과 갈등이라는 개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인류의 역사는 넓게 보면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다. 인류는 그 대립과 갈등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다.

선거가 코앞이다. 늘 그렇듯이 대립과 갈등은 선거를 전후하여 최고조에 이른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대립의 극단은 당연히 비극이다. 중요한 것은 그 대립이 늘 비극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대립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의 장점을 취하면서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 가는 이른바 상호간의 '잡종화'가 진행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의 한 명문 여자대학이 전통을 고집하는 동문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을 받아들여 남녀공학체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여성중심사회를 온몸으로 체험한 남학생들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받는 세상은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였다. 이러한 인간관을 가진 졸업생들은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직종에서 인기 만점 사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직장인상을 창출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여자대학과 공학체제의 대립에서 태어난 '잡종' 현상인 셈이다. 이처럼 대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창출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 사회는 편하기는 하지만 종국에는 퇴화하기 마련이다. 건강한 대립은 건강한 '잡종문화'의 토양이다. '대립'은 결코 '파멸'과 동의어가 아니다.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시교육청·사립학교간 갈등 더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학생의 고교 입학 배정 방식 등 주요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청과 사학 간의 갈등과 반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 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장휘국 교육감을 면담한 뒤 사학의 자율성 침해 금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사학의 자율성 보장,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권 인정, 공립과 같은 교원 명예퇴직 처리 등을 주장했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것으로 법적 사항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중학생의 고교 입학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각종 행·재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당국에 사립법인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태도는 완강하다. 사립학교 법인들의 사학 자율성 침해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요구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며, 명퇴신청도 공사립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노골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사립학교는 광주교육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온 게 사실이다. 광주가 지난 7년간 전국 1위라는 '실력 광주'의 위상을 지켜온 것도 사립학교의 몫이다.

그런 면에서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선 적극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은 안 된다. 사립학교도 그동안 교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만큼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등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양측의 반목이 계속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가짜석유 근절할 수 있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짜석유 제조, 판매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석유는 자동차 엔진이나 부품에 결함을 일으킬 수 있고, 탈세 등 유통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가짜석유 제조책과 중간공급책, 소매상 등 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북 경산시에 자동차 연료첨가제 생산공장을 설립한 뒤 시가 6600여만 원의 유사석유 4만ℓ 를 제조 광주 등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석유란 휘발유나 경유에 세율이 낮은 벤젠이나 톨루엔, 메탄올 등 다른 용제를 섞어 만든 불량 제품을 말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아주대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2009년 한해 국내에 유통된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20%가 가짜로 밝혀졌다.

가짜를 팔다 적발된 업소도 2009년 3040곳, 2010년 2342곳 등 해마다 수천 건에 이른다. 특히 비밀탱크까지 설치했다 적발된 주유소도 지난 4년간 1460곳으로, 전체의 4%에 달한다고 한다.

가짜석유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판매업소가 탈세를 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데 있다. 또 연비 저하에 엔진 부식, 차량 화재,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가짜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처벌수위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시기를 5월15일로 늦춰 잡은데다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사업장 내 위반사실 게시 등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1회만 적발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가짜가 유통되지 않도록 고발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CSI와 과학수사

이종혁

필자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에서 강력 및 과학수사를 전담하게 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강력사건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전담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데, 과학수사전담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수사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미국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시리즈'를 떠올린다.

2000년 10월 6일 미국 CBS 방송국에서 첫 방송된 CSI 시리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배경으로 발생한 각종 강력범죄나 지능범죄를 부검, 현장감식, 각종 과학적 증거분석기법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도 통계로는 CSI 시리즈를 전세계 약 7300만 명이 시청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가진 텔레비전 시리즈물로 보고됐다고 한다.

필자도 이 시리즈를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신속한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반면 선진적인 과학적 수사기법과 수사지원 시스템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론 우리의 수사 현실과 비교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과학수사기법을 우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일까?

검찰의 과학수사는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센터(DFC) 내 과학수사담당관실, 디지털수사담당관실, DNA수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 일선 검찰청의 과학수사 수요에 대검찰청의 각 부서가 서버 및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등 각종 디지털기기의 분석,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행동분석, 진술분석, 문서감정, 영상분석, 음성분석, 화재수사지원, 마약감식, 사건DNA 감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구조다.

또 전국 고등검찰청에도 자체 디지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고등검찰에서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모바일기기 등의 분석을 지원하는 디지털수사팀이 있다. 미국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수준은 서래마을 영아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첨예하게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고소사건이나 피의자가 부인하는 강력사건 등을 문서감정, DNA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 "경찰이 병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야간에 파출소에 돌을 던져 방충망을 부수고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10대가 구속기소됐다. 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에는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피의자가 '대한민국 경찰이 자신을 못 잡으면 병신'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과 도주하는 장면 등이 생생히 녹화돼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에 붙잡힌 피의자는 동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본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 음성분석실은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속의 음성과 영상녹화 조사 시 피의자 음성의 동일인 여부를 분석에 착수했다. 결국 동영상 속의 음성과 피의자의 성문 특징이 유사하고, 두 음성의 높이도 각각 118.1Hz, 118.2Hz로 거의 동일하며 발음 역시 독특한 특징이 관찰돼 동일인으로 판정됐다. 이 10대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또 대검 문서감정실에서도 최근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 준다고 백지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B가 그 백지로 A의 토지를 B자신이 매입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만들면서 A가 B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문제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상에 날인된 A의 인영과 매도인란의 B의 성명필적이 서로 겹쳐서 있다면, 과연 도장을 먼저 찍은 것인가 아니면 필적을 먼저 기재한 것인가를 밝혀냄으로써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CSI 드라마는 약 60분 동안 복잡한 강력사건 등을 재미있고 쉽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 과학수사의 결과물은 드라마와 같이 쉽게 도출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그 쉽지 않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지금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검사〉

기 고

광주~대구·부산 KTX 노선 서둘러야

권용일

획기적인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금 우리는 집 안방이나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 정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도 즉시 상대방과 전 지구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디 정보통신분야뿐이겠는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발달이 이루어져 우리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해지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항공수단의 발달로 한 대륙권의 경우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었고, 철도 수송기술의 발달은 수도권과 지방을 이미 오래전에 하루 생활권으로 묶어 놓았다. 이는 각 국가 간, 수도권과 지방 간에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국민 간, 주민 간의 문화와 정서적 동질성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이렇듯 국가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통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과연 국내의 지역과 지역 간의 교통사정은 어떨까. 광주~대구·부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영호남, 즉 광주와 대구를 잇는 연결로는 왕복 2차선 규모의 88고속도로가 유일하다. 이 도로를 통해 버스로 광주에서 대구를 거쳐 포항까지 이동하는 데는 무려 5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교통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양 지역을 하루에 오가면서 일을 본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의 왕래나 문화 정서적 교류도 그만큼 활발하지 못했다.

첨단기술,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접어 든지 오래지만, 광주~대구, 부산 간의 교통환경은 아직도 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 대구간 88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애초 길이 구불구불하고 높낮이가 심해 완공되기까지는 아직도 먼 세월이다.

하지만 만약 이 구간에 KTX가 설치된다면 광주~대구는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하루 생활권이 가능해 지고 인적 물적 교류 또한 그만큼 활발해 질 수 있어 영호남의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도 그만큼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북미에서 아시아, 즉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교류의 창구가 서남해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것도 없이 광주와 부산 목포, 광양 등은 인천, 군산, 포항, 대구, 울산 등과 함께 서남해안 벨트로서 대 중국무역의 전진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산과 광주 간, 광주와 대구간은 한 묶음으로서 활발한 물적 인적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후진적 교통환경으로 인해 이것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시급히 극복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와 대구, 부산을 잇는 KTX 노선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KTX 노선은 물류수송수단으로서 또한 중국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갈라져 있고, 분절되어 있는 영호남, 동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설치해야 할 국가 인프라라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다. 많은 영호남 주민들은 이 총선과 대선에서 광주와 대구·부산을 잇는 KTX 노선 설치가 이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각 당과 당의 주자들이 이 문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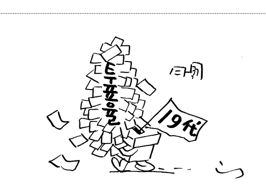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 정치권이 목포-광주-부산을 잇는 KTX의 시급함을 인식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사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부탁드린다. 〈광주 남구의회 의장〉

無等鼓

300명의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 총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적인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희비를 갈랐다. 60.6%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이, 46.1%에 그쳤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생애 첫 투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투표율이 55%를 넘으면 민주통합당에, 그 이하이면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광주지역 투표율이다. 광주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4대(1992년)까지만 해도 70%를 넘었고, 15대의 경우 64.5%로 떨어졌지만 서울(61.0%)은 물론 전국 평균 (63.9%)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16대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18대에는 42.4%로 전국 평균(46.1%)은 물론 서울의 45.8%보다도 낮아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엔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와 시민단체들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YMCA의 '생애 첫 투표인단'이 대표적이다.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이 단체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반값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개선,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했다. 청년들에게는 '친구 다섯 명과 함께 반드시 투표하기' '일하는 일꾼 뽑기' 등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은 소중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1993년 4월 12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정치를 바꾸고, 자신의 요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면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새내기부터 모든 유권자가 이번 투표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4·11 총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대결해야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분명히 밝혀 검증 및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어야할 선거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켜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남게 하는 것이 우리 선거풍토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선거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위해서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은 서로 협력하여 검증시간도 주지 않는 '깜짝 공약'이나 '헛 공약'을 발표하지 말고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좋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조속히 완성하여 말로만이 아닌 문서로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 공약의 목표는 가능한 것인지, 기간이나 공정은 충분한 것인지,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이나 금액 등은 타당한 것인지, 꼭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그 공약이 실천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후보자의 추진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라면 선거로써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지도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매니페스토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언론,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다 더 정당이나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갖고 선거에 임하도록 유도하여 정치선진화가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송석현·광주시 남구 송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